

<p>제8조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직장내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p> <p>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p> <p>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신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9조(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은 근로여성의 적성·능력·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 및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5조(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능력·경력 및 기능의 - - .</p>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4. [성명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여성노동권 팔아먹는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생리휴가 폐지, 연장·야간·휴일근로제한 완화 등 근로기준법 개악음모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30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열어 생리휴가 폐지와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과 연계시켜 논의하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에 대해 530만 여성노동자들은 분노한다.

금속산업연맹은 노동부장관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본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것도 밥상의 가십거리로 생리휴가폐지를 논의했다는 것이 더욱 경악스럽다.

전체 여성노동자 가운데 3/4이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인데다 5인미만 사업장에 70%의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4대보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임을 노동부 장관은 정말 모르고 있던 말인가? 연맹은 생리휴가 폐지와 여성노동자 관련 모성보호 조항 확대 연계는 근로기준법의 개악음모가 분명함을 밝히며 근로기준법의 개악음모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전체 여성노동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산전후휴가 30일 연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여성노동자들을 현혹시켜 놓은 뒤 연장·야간·휴일 근로 규제 완화와 생리휴가 폐지 등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음모는 노동자들의 목줄을 조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음이 분명하다. 연맹은 모성권의 확대 강화 및 사회 분담화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후퇴와 결코 함께 논의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신자유주의 분쇄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모성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갈 것임을 밝히며, 현재 국회와 정부가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모성권 확대와 맞바꾸고자하는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5.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음 :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

보냄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중복지연대, 살맛나는 세상, 서울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 여성 공감,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청년진보당 여성위원회, 파견 철폐 공대위

날짜 : 2001년 6월 11일 (월)

제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성보호조항 전면삭제안 동의 근거에 대한 공개 질의' 권

1. 모성보호정책의 강화 및 비용의 사회분담화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중반부터 여성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담보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출산휴가를 14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여 모성보호협약이 개정되었고 국내에서도 2000년 16대 총선과정에서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이러한 여건에서 2000년 8월 24일 여성·노동계가 구성한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가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핵심 내용은 당시 보도자료의 부제목과 같이 "성희롱 범주 및 벌칙 강화, 직장내 폭행 예방조치 신설, 모성보호 강화 및 사회분담화 명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의 개정 요구였습니다.
3.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안은 김정숙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한나라당안과 한명숙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민주당안 등 2건으로, 환경노동위원회의 법개정안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출산휴가 90일 연장을 미끼로 야간, 휴일, 시간외, 유해, 위험업무로부터의 여성보호조항을 모두 삭제(민주당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개정안)하고 생리휴가제를 노사정위로 넘겨 월차휴가와 함께 폐지하며 시간외 가산수당 등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삭감하는 등의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경총 등이 여성에 대한 생리휴가, 시간외근로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도덕상 보건 상 유해업무에의 사용금지 등 여성보호조항들의 폐지를 논의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4. 그런데 귀 단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여성노동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 출산휴가연장과 여성보호규정들을 맞바꾸고 생리휴가는 노사정위원회로 넘겨 철 폐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의도를 모를 리 없는 귀 단체들이 어떤 근거로 공개적인 논의 없이 여성노동자 전체에게 아니 노동자전체에게 미칠 중요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데 동의하였습니까?
 - 출산휴가 30일 연장의 대가로, 열악할 대로 열악한 여성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한 '근로기준법 상 보호규정 삭제'에 귀 단체들이 동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5.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쟁취투쟁은 노동법의 전반적인 개악에 맞서 싸우는 과정의 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휴일노동, 야간노동, 장시간노동으로부터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조항들은 마땅히 남성노동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현장에서 평등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여성보호조항들을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조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작년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에서 입법청원서를 마련하여 제출한 이후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를 앞둔 현 시점까지의 '입장' 변화에 대한 귀 단체들의 투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의 큰 기틀을 마련하는 중대한 시기이기에 현 논의는 공론화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여성 노동권·모성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귀 단체들이 이러한 공개 질의를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귀 단체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빠른 시일 내 기대하겠습니다.

<참고> 국민일보 특별기고-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 (정리자 주 : 여성임금의 하락을 전제로 한 여성고용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략)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논의는 4개항의 모성보호 관련 조항 전체를 우선 통과시킨 후 점차 국고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국민건강 보험을 통한 전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를 실현시킨다는 기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실현이 곧바로 여성고용 기회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다. 모성보호가 강화되면 일하고자 하는 여성이 늘게 되고 따라서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되어 시장임금이 하락되고, 자연히 여성고용이 증가되는 것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다.

셋째. 현실 조건 상 모성보호 확대가 경총이 주장하는 대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부가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63%가 육아휴직제가 도입돼도 사용할 생각이 없으며, 나머지 37%의 육아휴직 희망기간도 평균 3개월 뿐이었다. 또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단 4명의 남성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현실을 볼 때, 기업 측이 12만명에 달하는 육아휴직 대상 남성들이 모두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추산한 비용은 근거가 없다.(후략)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진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보호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후퇴시킬 수 있는 개악안을 담고 있기에 민주노총은 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은 개악임을 분명히 주장한다.

현재 여성노동자는 4명중 3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나아가 가사와 육아노동의 전담자라는 현실적 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척박하고, 사회적인 어떠한 안전망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안과 같이 여성노동자의 보호규제가 완화, 허용된다면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 그리고 노동권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실질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하는 추세에 역행하므로써 결국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자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의 문제점

1)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금지, 제69조 시간외근로 규제 조항

현행 여자와 18세미만인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근로시키지 못하고,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환경노동위 대안에서 18세미만인자와 일반여성은 물론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까지 야업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동의'와 '청구'는 허용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과 동의로 이루어진다. 18세 미만의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동의하지 않거나, 임신부가 사용자의 요구에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면 고용관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구체적으로 제한을 규정하는 듯하지만 현실의 근로관계를 볼 때 이는 사용자 마음대로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다. 그동안 야업을 금지해 왔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18세미만의 청소년과 여성을 고용해온 게 사실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당장의 이익과 이윤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미래

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오히려 국회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사용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18세미만의 청소년과 여성의 노동자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법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행위인 것이다.

(2)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근무조건 저하를 초래한다.

야업과 휴일근로 금지, 시간외근로 제한이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성노동자 채용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그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채용의 기회를 제한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노동자 고용시 같은 값이면 남성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사업장이 여성노동자의 야간, 휴일, 시간외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규제로 인한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논리는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내모는 제도적 장치 마련인 것이다. 결국 여성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근무조건 후퇴와 다를 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 사용금지 조항

현행 여자와 18세미만인자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자, 18세미만인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를 유해·위험한 업무에 완전히 노출시키므로써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나아가 모성보호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분명한 개악이다.

항에서 18세이상의 여성에게 임신 또는 출산기능에 유해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산재사고와 달리 여성이 유해한 사업에서 일을 하므로써 몸에 축적된 유해한 물질이 기형아를 생산하거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안법률안의 제63조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모성보호의 기본취지를 무시하고 18세이상의 여성노동자를 유해한 사업장에 노출해 결국 조기폐경기를 맞아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기형아 출산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 조항의 변경은 개악이라 생각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3) 근로기준법 제70조 갱내근로금지 조항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일시적으로 여성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실상 여성노동자의 갱내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과 같이 갱내근로는 직접적으로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일시적 업무와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제한하더라도 일시적이라는 기간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내근로의 조건과 내용이 불분명하다. 비록 의료, 보도, 취재 등의 업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한 물질은 결국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파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노동자의 갱내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결론

국회 환경노동위 대안이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진전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모성보호의 기본이 흔들리는 속에서 모성보호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률 전체를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더라도 위의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만으로도 국회 환경노동위가 제출한 대안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분명한 개악인 것이다.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법개정의 취지는 사회적 기능인 모성을 사회가 분담하고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도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올해의 법개정으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현재보다 월등히 향상시키고 모든 차별을 없애으로써 당장에 평등을 실현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개악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대흐름에 역행하여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애초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 분노한다. 민주노총은 현행의 어떠한 법개악 없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밝힌다.

여성 관련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개 노동사회여성 단체

서울여성노조,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장애여성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파견철폐공대위,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민중복지연대, 전국학생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관악여성모임연대, 살맛나는세상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 전화 (02)756-3656 / 전송 (02)778-4006 / 이메일 tspart@jinbo.net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일시 : 2001. 6. 26.

■ 문의 : 파견철폐공대위 구미영(016-699-0600, 756-3656)

■ 별첨 자료: 성명서 / 근로기준법 개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실태 보고

보 도 자 료

모성보호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한다. - 여성 노동자들 국회 안 기습시위

출산휴가 연장을 미끼로 한 여성 관련 근기법 개악을 반대한다!

여성보호조항 삭제없는 모성권 강화를 요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성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경의를 보냅니다.

2. 여성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엔 아랑곳없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오늘 오후 환경노동위에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더욱이 육아휴직에 대해선 유급기간 및 지원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결국 후퇴된 수정안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여야 3당은 '유급 생리휴가 처리에 관한 결의안'까지 채택한다 하니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뺏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야 3당의 야합에 의해 알맹이없는 모성보호법안과 더욱 개악된 근로기준법이 오늘 통과된 것입니다.

3.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현장의 여성 노동자들, 여성·노동·사회·학생단체들은 여성관련보호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의 환경노동위 의결에 대해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환경노동위 위원장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가결을 선언하자 회의장에서 방청하고 있던 민주노총 공공연맹 여성국장 심재옥씨와 서울여성노조 위원장 정양희씨가 “모성보호 운운하며 근기법 개악

하는 환노위는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끌려나왔습니다. 국회 로비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민간서비스연맹, 금속연맹, 전교조)과 사회단체 회원들 10여명(장애여성 공감, 서울여성노조,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파견철폐공대위, 청년진보당)은 끌려나온 사람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회 로비에서 기습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국회 청원경찰들은 피켓을 찢고 시위 참가자들을 질질 끌어서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성 노동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로비 밖에서도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3당 야합에 의한 여성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였습니다.

4. 작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이들 3개의 법률에서 몇개의 법조문을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여 “환경노동위원회법률안(대안)”을 제출하였고, 이 법률안(대안)이 편의상 모성보호법으로 지칭됨으로써 근로기준법 개악 내용이 잘 알려지지 못하였습니다.

5. 환경노동위원회법률안(대안)은 산전산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등 개선된 법개정 내용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들의 완화라는 개악도 포함되어 있어, 만일 위 법률안(대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여성노동자들은 물론 향후 전체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여성보호조항과 모성권이 흥정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여성·노동·사회·학생단체들은 대안법률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총력 저지할 것을 결의하여 집회와 선전을 진행해왔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를 삭제하고 임신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조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 법조문은 근기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시 고용주의 위법한 장시간노동을 막아온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9조는 여성의 시간외노동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야간, 휴일노동 뿐만 교대 또는 일반사업장에서 여성의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아왔으며 이 법조문으로 인하여 그나마 법을 위반하여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되었던 법조문입니다.

▷ 위와 같이 근기법제 68조, 제69조를 삭제할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곧바로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받아 최장 주 68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며, 이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은 이 보다도 더 많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성에게 유해, 위험 사업장 종사 금지와 금지직종이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험하지 않으면 전부 터 놓겠다고 합니다.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험한 금지직종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이러한 금지직종이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태에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은 특히,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불임, 산재, 직업병 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한 근로기준법 제70조(갱내근로 금지)는 비록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허용한다고 하지만, 일시적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에게 허용되는 갱내근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명확한 모법의 단서로 인하여 향후 갱내근로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6. 22일 확정된 민주당 수정안은 위 환경노동위 법률안에서 더욱 후퇴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태아검진 및 유산, 사산, 휴가, 가족간호휴직 등을 모두 삭제하고 육아휴직 유급수당을 월 25만원에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생리휴가 또한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개악안은 민주당의 법안이 모성보호를 미끼로 여성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7. 정치권은 '여성 노동자가 야간, 휴일에도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운운하며 근로기준법 63조, 69조, 70조 삭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남성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현재의 여성 노동자에게 연장, 야간근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임금 차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으면서 여성노동보호조항들을 전면삭제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를 더욱 고통에 빠트리는데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먼저 보육시설을 완비하지 않는다면 연장, 야간근로는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8. 참고로 국회안 기습 시위 전에 한 국회 앞 규탄 집회 내용을 실겠습니다.

<여성관련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연대집회>

- 6월 26일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참가 단위: 민주노총, 서울여성노조,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장애여성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파견철폐공대위,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민중복지연대, 전국학생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관악여성모임연대, 살맛나는 세상

- 발언 내용

1. 여성 관련 근기법 개악의 경과 보고

1. 김대중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발언

3.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이 향후 노동법 개악에 미치는 영향

4. 현실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
 -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
 - ② 장애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
5. 투쟁결의문 낭독

7. 이를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6.26

< 별첨 문서 1 >

근로기준법내 여성의 야간,휴일 시간외근로 폐지에 대한 문제점

(탄력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비정규직 교대근무사업장 사례)

수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작성일 : 2001년 6월 19일

제출자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자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8조, 제69조가 전면 개악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제

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6시간 이라는 불규칙한 장시간, 저임금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범조항 이상의 노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상천외한 근무형태가 사용주에 의하여 개발될 것이며 이로 인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권 침해는 물론이고 빈곤, 산업재해, 직업병, 과로사 등 폐해가 예상된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사업장 사례

1) 서울지하철 (역무의 3조2교대 근무형태 중심)

서울지하철은 여객을 운송하는 공기업이다. 1987년 8월 12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창립 이전에는 휴일 없는 1일 24시간 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으나 1989년에 와서는 이전 보다 개선된 새로운 교대제 근무형태(4조3교대)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야간근로시 14시간(휴게시간 2시간 포함), 휴일근로시 11시간 이라는 장시간 근무를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10년여 동안 사용주(서울시, 공사)의 끊임없는 근무형태 개악의 공격은 1997년 노동법개악 이후부터 더욱 강해졌다. 왜냐하면 노동법개악이후 특정일 12시간을 근무하여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막기 위한 계속적인 투쟁을 해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사용주는 수년동안 신규직원 채용을 동결하여 기존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4조 3교대 운영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휴무도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으로 인원이 빠지는 등 유고율이 높아지면서 남아있는 최소인원으로 4조 3교대제 근무는 높은 노동강도가 요구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4조3교대 근무형태라는 기득의 권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99년 4월 19일 파업 이후 후유증 등 2000년 12월 역무, 승무, 기술, 차량 전 분야는 탄력제근로시간제가 적용된 근무형태로 바뀌었다.

지하철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사업의 특성상 야간,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역무, 승무, 기술, 차량 4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근무형태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교번제와 교대제로 나뉘며 교대제의 경우는 3조2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동일한 3조 2교대라고 하더라도 역무와 기술의 각기 다른 근무시

간에 따라 근무 패턴 역시 각기 다르게 순환된다. 승무의 경우는 열차 운행시간에 맞춘 교번제근무로써 오전 6시에 출근하는 새벽근무, 새벽4시에 출근하는 박(숙박)근무 등 매우 불규칙한 근무가 열차운행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 실제 예 : 표1 > 5월의 경우, 병반, 홍길동의 근무

(3교대조 - 갑반, 을반, 병반으로 편성)

※ 3조 2교대 -> 1주 통상근무(A), 2주 야간근무(B) 3주 단위 순환

비 : 비번

휴 : 주휴일 (A조 1일, B조 2일)

B근무 : 야간근무(저녁6시~익일9시30분) 총 15시간 30분 근무(휴게 4시간 포함)

근무는 11시간 30분으로 인정.

A근무 : 통상근무(오전9시~오후6시30분) 총 9시간 30분 (전부 근무시간인정)

홍길동의 5월 총 근로시간 -> A근무 6일 × 9시간 30분

B근무 11일 × 11시간 30분

(합계 - 183시간 30분)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문제점 (역무의 3조2교대제 중심)

지하철 탄력근로시간제 요지 :

- 월 18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시간외 수당 지급

일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무	비	B	비	B	비	B	비	B	비	B	비	B	비	휴	A	
일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무	A	A	A	A	A	휴	휴	B	비	B	비	B	비	B	비	B

-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역무의 경우 4시간) 노동시간에서 공제하여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함.

- 월별 그리고 주휴일 사용 방법에 따라 급여 차이 발생, 급여의 불고정

성

위 <표1> 과 같이 월 총 183시간 30분의 근무를 하지만 탄력적근로시간제에 의하여 1개월 단위 월 18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초과근로가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4시간을 공제하더라도 월 45시간 30분이 발생된다. 이와 같이 특정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여도 시간외가 발생치 않는다.

승무의 교번제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다이아(근무개념)에 따른 불규칙한 근무로 1일 12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넘는 장시간노동을 하지만 이들 근무시간을 전부 합쳐도 월 184시간이 되지 않는다. 시간외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휴일시 대체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월 184시간을 넘기기 어렵다. 왜냐하면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이 휴일근무의 경우 1개의 휴일을 쉬고 2번째 휴일시 휴일근무를 할 경우 기본 8시간을 공제한 나머지만 시간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2000년 4월 7일 지하철 승무의 단독 파업의 이유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문제를 제기한 파업이었다.

3. 3조3교대제 지하철 청소용역 사례

서울 지하철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도급청소계약을 매년 체결한다.

계약금액은 청소면적의 증감 (㎡ 당 단가)으로 결정되며 이것은 청소용원의 증감과 관련있다.

1-4호선(115개역) 까지 1000여명 가량의 청소 용원이 있으며 대부분이 여자이다.

이들의 근무형태는 3조 3교대제로, 각각 9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한다.

야간반은 저녁9시-익일 06시까지, 오전반은 오전6시-오후3시,

오후반은 12시-오후9시까지 24시간 FULL운영된다.

청소용원들은 각역의 청소면적에 비례하여 배치되며 이 인원이 3개조로 나뉜다.

4호선 K역의 경우 7571㎡ 면적에 8명이 3개조로 나뉘어 근무를 한다.,

(오전반 3명, 오후반 3명, 야간반 2명).

<표2 : 용원의 청소량>

※ 검은 부분은 일일 업무량

4. 근기법상 여자의 야간, 휴일, 시간외근로 개악시 예상되는 문제점.

① 지하철공사의 역무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남자들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 의한 3조2교대의 근무형태가 아닌 통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유는 현재의 노동

조건보다 저하된 근무형태 시행에 반대한 노동조합의 10년 투쟁과 현 근로기준법상 여자의 야간, 휴일근로시 현 역무의 근무형태는 근기법 제69조의 법정요건에 맞지 않아 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환노위법률안(대안)이 국회 통과시 지하철의 경우, 역무 여성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은 시간문제이다.

방법	대합실	승강장	로반	로반벽체	화장실	출입구 계단	사무실 침실	기능실
왁스작업	월1회	월1회	-	-	-		월1회	분기1
물세척	월1회 (월2회)	월1회 (월2회)	월1회		일5회	주1회 (주2회)	월1회	분기1
먼지청소	일2회	일2회	-	-	일5회	일4회	일1회	월1회
물다스탕 마포작업	일2회	일2회	-		물마포 5회	물마포 일4회	일1회	월1회
줍기	수시	수시	주1회	-	수시	수시	일1회	월1회

현재 지하철노동조합은 유해한 지하공간에서 열차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석면으로 인한 폐암, 대량의 난청보유자(97년 통계 1000여명) 등 직업병이 발생되고 있다. 기술의 설비파트는 폐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았으나 역무의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중이다.

② 지하철공사는 재향군인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자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야간, 휴일노동의 3조3교대제를 준수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항우용역에서 야간수당 등 임금을 중간착취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 그러나 1개조반 3명이 7571㎡ 면적을 <표2>의 방법대로 청소할 수 있듯이 현재 굳이 8명을 고용하여 3교대를 해야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를 위반한 근무형태의 고용이 위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환노위법률안(대안)이 통과될 경우 본인의 동의서, 노동부장관 인가 삭제와 시간외근로 제한 폐지는 곧 바로 근기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특정 일12시간 특정주 56시간이라는 근무형태의 최소 인원으로도 현재의 청소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5. 결론

위와 같이 한국내 노사관계에 있어서 투쟁성과 단단한 조직력으로 비교적 노동조합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인한

장시간노동과 임금감소, 인력 감축, 노동강도 강화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4월 지하철노조 승무지부는 승무원의 단독파업을 단행하였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인력감축과 장시간노동 이외 다양한 근무시스템을 개발하여 총근로계산 방법과 각종 수당 계산 방법에서 위법, 편법을 동원할 수 있어 저임금을 조장한다.

또한 지하철공사의 청소도급계약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기업으로서 법 위반을 할 수 없어 도급계약시 1000여명의 용원의 근무형태를 3조3교대제를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여성 청소용원에게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면, 지하철공사는 인력감축의 효과로만으로도 상당한 도급계약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야간, 휴일, 시간외근로 보호조항 폐지는 탄력적근로시간제라는 악법의 적용, 주당 노동시간 평균 55.1시간으로 세계 1위 1) 여성노동자가 많이 고용되어 있는 호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휴일,휴가 미실시라는 근로기준법 위반²⁾ 등 선진국과 다른 노동현장의 악조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평등이라는 기만적인 논리 포장으로 위 법조항이 개악되어서는 않된다. 기업주의 비용절감, 소수 엘리트 여성인력의 노동보장의 입장에서 개악된 환노위법률안(대안)은 장시간, 저임금노동으로 인간의 기본권 유린,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가정해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끝.

<별첨 문서2>

여성의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금지조항 삭제를 반대한다 !!

여성노동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폐기하라 !!

여성보호조항삭제 없는 모성권강화를 요구한다!!

1) 미국 여론조사기관 로퍼 스타치 월드와이드 조사. 2001년 6월 11일 한겨레 보도

2) 노동부 2001년 5월 비정규직 고용대상 사업장 지도감독 결과 . 2001년 6월 18일 한겨레 보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지금, 정권은 노동시간단축을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복수노조금지 5년유예도 모자라 월차휴가폐지, 주휴일 무급화, 최장 1년단위의 변형근로제 확대 등의 근로기준법 개악 뿐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입법·기업변동시 고용과 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개악의 결과 노동시간단축은 말뿐이고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증가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6월 국회에서 결판을 보겠다는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은 더욱 심각하다. 출산휴가 90일 연장을 명분으로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금지조항들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들이 여성보호조항전면삭제에 동의하고 그 근거를 밝혀달라는 공개질의에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여성노동관련 개정안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두 개이다. 하나는 한나라당 김정숙의원 대표 발의안(2000. 6. 29)으로 유급태아검진휴가신설, 유급출산휴가 90일로 연장,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가 모성급여를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나는 민주당 한명숙의원 대표 발의안(2000. 11. 25)으로 임신여성보호조항, 출산휴가연장등의 내용과 함께 여성보호조항(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두 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이 결렬되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계류되지 못한 상태다.

김대중 정부의 총선공약이었던 모성보호강화 조항들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나, 재계와 자민련의 조직적 반발로 정치권은 기만적인 2년 유예에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비용의 문제를 들먹거리며 출산휴가만 90일로 연장하는 기만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5월 30일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 위원들과 오찬회동을 열어 생리휴가 폐지와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을 연계시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모성보호 입법 제정시 생리휴가 폐지, 여성관련 근기법 개악이라는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기업부담 증가,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경총과 전경련은 끊임없이 여성고용에 대한 기업부담이 늘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여성노동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와 여성·노동계를 압박해 왔던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모성보호조항중 출산휴가연장과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을 맞바꾸고 생리휴가는 노사정위원회로 넘겨 폐지하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자본의 경제논리와 김대중정부의 생색내기식 개혁속에 희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찢리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가 시키는대로 야간노동, 연장노동, 휴일노동도 할 수밖에 없고 생리휴가는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아직도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특히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근기법상 보장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모성보호조항과 여성보호조항을 맞바꾸려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절대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모성권 강화와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온전히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중복지연대, 살맛나는 세상, 서울여성노조,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청년진보당 여성위원회, 과전철폐 공대위, 관악여성모임연대**

노동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올바른 모성보호법 제정 투쟁을 위한 제안

1. 2001년도 들어와 진행된 노동법 개악의 내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유예와 맞바꾼 복수노조금지 유보 조치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하는데 성공하였다.
- 모성보호를 미끼로 이루어진 여성노동 일반에 대한 보호규정의 폐지·완화
 - 여성노동자의 용이한 착취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폐지·완화함으로써 여성노동 부문에 있어서의 노동유연화에 성공하였다.

2. 현재의 상황 -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노동유연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자본과 정권은 정규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는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유급주휴제 폐지, 생리휴가 폐지, 유급월차휴가 폐지,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50%에서 25%로 인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등 노동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을 연내에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 노사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에게 한두 가지 내어주고 더 많은 것들의 양보를 강요하며 전체 노동자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자본과 현 정권의 기만적인 작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3.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문제점

- 전체 노동자의 1/3 수준에 불과한 정규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이라는 협소한 요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정규직 노동자에게 토요일에 일하지 않고 쉴 자유를 달라!

○ 이러한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도 신자유주의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유연화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본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수준에서 양보해야 할 것인가?

○ 2000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전선의 전면에 배치·구축되는 것을 방해하는 논거로 활용되었다. -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방기하는 방편으로 왜곡된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최우선의 투쟁 과제로 고집하였다.

○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기에 있어서는 단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토요일에 쉴 자유를 요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주5일근무제 쟁취가 아니라, 전체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는 '연장근로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을 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 이 번에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개악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의 폐지라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제외하고는 남녀노동자 모두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 한도라는 제한만 받게 될 뿐인바,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의 최장 한도를 1주일 6시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라고 보여진다.

4. 올바른 모성보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의 방안

1)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 투쟁

○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업무의 선정과 갱내근로가 허용되는 업무의 선정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올 11월 이전에 근로기준법시행령 또한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현행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산전후휴가를 제외한 여성보호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비록 형해화되어버린 여성보호 조항 이더라도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수준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 여성노동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업무의 선정에 있어서도, 이번에 개정된 근로

기준법이 모성보호를 임신·출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그 범주를 축소시키고 여성노동 일반에 대한 보호를 모성보호로부터 분리시켜내려고 하고 의도에 맞서서, 임신부를 제외한 일반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업무가 협소하게 규정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도 적어도 통상임금의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투쟁

○ 지난 4월에 벌어진 '모성보호법 즉각 실시냐? 시행 2년 유보냐?'라는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논쟁의 결과는 11월부터 산전후휴가기간의 90일로의 확대와 형식적인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실시만이 이루어졌을 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제도들의 도입은 무기한 유보되었다.

○ 현재의 수준에서 이 정도가 어디냐라는 패배주의적, 개량주의적인 흐름을 뛰어넘어 올바르게 제대로 된 모성보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결코 아니되는바, 적어도 유·사산유급휴가제도, 유급태아검진휴가제도, 자녀간호휴가제도 등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

○ 산전후휴가기간이 늘어난 30일에 대해서도 완전 유급휴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급육아휴직제도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개정되어야 한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노동자가 정부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에게 지출된 비용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3>

제목: [자료]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 개정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유해, 위험, 연장, 초과, 야간근로 수당에의 여성노동자 보호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의 소속단체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던 민주노총이 13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일 민주노총 집회 때도 같은 내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진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보호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후퇴시킬 수 있는 개악안을 담고 있기에 민주노총은 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은 개악임을 분명히 주장한다.

현재 여성노동자는 4명중 3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자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나아가 가사와 육아노동의 전담자라는 현실적 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척박하고, 사회적인 어떠한 안전망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안과 같이 여성노동자의 보호규제가 완화, 허용된다면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 그리고 노동권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실질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하는 추세에 역행하므로써 결국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자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의 문제점

1)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금지, 제69조 시간외근로 규제 조항

현행 여자와 18세미만인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근로시키지 못하고,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환경노동위 대안에서 18세미만인자와 일반여성은 물론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까지 야업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동의'와 '청구'는 허용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과 동의로 이루어진다. 18세 미만의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동의하지 않거나, 임산부가 사용자의 요구에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면 고용관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구체적으로 제한을 규정하는 듯하지만 현실의 근로관계를 볼 때 이는 사용자 마음대로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다. 그동안 야업을 금지해 왔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18세미만의 청소년과 여성을 고용해온 게 사실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당장의 이익과 이윤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오히려 국회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사용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18세미만의 청소년과 여성의 노동자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법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행위인 것이다.

(2)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근무조건 저하를 초래한다.

야업과 휴일근로 금지, 시간외근로 제한이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성노동자 채용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그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채용의 기회를 제한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자 고용시 같은 값이면 남성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사업장이 여성노동자의 야간, 휴일, 시간외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규제로 인한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논리는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내모는 제도적 장치 마련인 것이다. 결국 여성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근무조건의 후퇴와 다름 아니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 사용금지 조항

현행 여자와 18세미만인자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자, 18세미만인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를 유해·위험한 업무에 완전히 노출시키므로써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나아가 모성보호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분명한 개악이다.

항에서 18세이상의 여성에게 임신 또는 출산기능에 유해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산재사고와 달리 여성이 유해한 사업에서 일을 하므로써 몸에 축적된 유해한 물질이 기형아를 생산하거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안법률안의 제63조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모성보호의 기본취지를 무시하고 18세이상의 여성노동자를 유해한 사업장에 노출해 결국 조기폐경기를 맞아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기형아 출산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 조항의 변경은 개악이라 생각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3) 근로기준법 제70조 갱내근로금지 조항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일시적으로 여성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실상 여성노동자의 갱내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과 같이 갱내근로는 직접적으로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일시적 업무와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제한하더라도 일시적이라는 기간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내근로의 조건과 내용이 불분명하다. 비록 의료, 보도, 취재 등의 업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한 물질은 결국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파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노동자의 갱내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결론

국회 환경노동위 대안이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진전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모성보호의 기본이 흔들리는 속에서 모성보호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률 전체를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더라도 위의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만으로도 국회 환경노동위가 제출한 대안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분명한 개악인 것이다.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법개정의 취지는 사회적 기능인 모성을 사회가 분담하고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도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올해의 법개정으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현재보다 월등히 향상시키고 모든 차별을 없애므로써 당장에 평등을 실현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개악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대흐름에 역행하여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애초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 분노한다. 민주노총은 현행의 어떠한 법개악 없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밝힌다.

제목: [성명]여성 연장야간휴일근로 개악법안 철회해야 < 민주노총 2001.6.23 성명서 >

민노총
2001.6.23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개악법안 즉각 철회하라!

- 국회 환노위는 530만 여성노동자를 속이고 있는 법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 뜻 대표하는 기구임을 포기하려는가?"

1.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이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법안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집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4월에는 '2년 유예안', 5월에는 모성보호 조항 중 '산전후휴가 90일만 보장'으로 여성노동자를 우롱한 바 있다. 급기야 민주당이 6월20일 환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개악되는 조항은 그대로 하되 출산휴가 90일 보장과 육아휴직시 임금 대폭삭감,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생리휴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민련 등의 행태를 볼 때 각 정당과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기구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2. 민주당과 자민련, 한나라당이 근로기준법의 여성노동자의 보호조항인 63조(유해위험사업장의 여성근로 금지), 68조(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69조(시간외근로 규제), 70조(깁내근로 금지) 등을 허용하고 완화하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모성보호와 건강권, 노동권까지 위협하는 것이며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와 비정규직의 가속화로 자본의 구미에 맞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관철하고자 하는 기도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환노위 대안법률안의 여성보호조항 개악철회를 촉구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개악철회는 커녕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수차례 공표해온 유급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마저 삭제하겠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개정으로 포장한 환노위 대안법률안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이다"

3. 민주당이 내놓은 조정은 환노위의 대안보다도 엄청나게 후퇴하여 유급태아검진휴가, 유·사산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삭제하고 시행시기마저 내년 1월로 연기하는 것이다. 출산휴가 연장, 유사산휴가 신설, 유급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등은 여성노동자의 법개정 요구 이전에 김대중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우린 기억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모성보호의 강화와 사회적 분담화를 위한 여성노동법 개정은 김대중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민주당과 정부는 대선공약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재계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여성보호조항 삭제 △유급태아검진 및 유산·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삭제 △육아휴직시 지급하는 임금액 대폭 삭감 △생리휴가 폐지 등의 안은 '모성보호개정안'으로 포장된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불과한 것이다.

"여성노동자 현실과 요구 외면하는 정당과 정치인 응징할 터"

4. 여성노동자의 4분의 3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다. 남성노동자의 60%도 안되는 임금에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이 땅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대통령 공약에도 훨씬 못미치는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 생리휴가를 폐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집권여당 민주당을 '반여성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한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절절한 요구에 눈감고, 개악을 개정으로 포장하고 있는 모든 정당, 정치인들도 530만 여성노동자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한다.

"모성보호 흥정대상 아니다. 근로기준법 개악기도 중단하라"

5. 모성보호는 자본과 국회가 주고받을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여성노동자와 18세미만 청소년은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다시한번 촉구한다.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지금이라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근로기준법 개악기도를 당장 그만두라!

민주노총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530만 여성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악에 앞장서거나 동의한 반역사적이고, 반노동자적이며, 반여성적인 정권과 정당, 국회의원 등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끝>

여성노동자는 '자유롭게 장시간 노동할 권리'를 원치 않는다

여성노동자는 '자유롭게 장시간 노동할 권리'를 원치 않는다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규탄 성명서

6월 27일 여야 3당은 여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기만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환경노동위에서 통과시켰다. 정치권은 이 개악안을 '모성보호법'이라 부르면서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에 큰 진전을 가져오는 법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통과된 법안의 실상을 보면 결코 모성보호법이라 부를 수 없음을,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악법에 불과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위험 노동을 규제하던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삭제되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삭제되고 임신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조항으로 축소되었다. 그나마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에 야간 근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이러한 단서가 사업장에선 무력할 것임은 너무나도 뻔하다. 야간, 휴일노동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아왔으며, 그나마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되었던 근로기준법 제 69조(시간의 근로 규제) 또한 삭제되어 버렸다. 자본은 이제 밤낮 가릴 필요없이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개악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변형근로가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여성 노동자는 이제 최장 주 68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며, 근기법이 준수되지 않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보다 더 많은 노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 밖에 임신 또는 출산에 위협하지 않은 유해 위험 업무라면 여성 노동자에게 시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63조, 70조도 삭제되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해 여성노동자가 야간, 휴일에도 자유로이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도대체 이 땅의 어느 여성 노동자가 밤낮없이, 휴일도 없이 '장시간 일할 권리'를 요구하였단 말인가. 아직도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번 근기법 개악은 재앙과 같은 사태이다.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의 현실일진대, 여성 노동자의 전업 신청을 어찌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여성보호 조항, 다음에는 생리휴가. 계속되는 노동법 개악 시도 규탄한다.

모성권 관련 부분을 보더라도 이 법안이 모성권보호 보다는 노동기본권 후퇴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존 모성보호 입법안 중 산후휴가 30일 연장과 육아휴직 수당만 남고 모두 제외되었다. 육아휴직 수당의 급여액과 지급기간을 시행령에 일임함으로써 결국 건강보험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수당이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모성권 관련 법안들조차 망신창이로 만들면서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대폭 후퇴된 것이 소위 '모성보호법'이라는 것의 핵심이다. 게다가 환경노동위원회는 '생리휴가 처리 방안'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노사정위에서 유급 생리휴가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하나 하나 낮춰가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전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들 또한 준비되고 있다. 월차휴가 폐지, 퇴직금제 폐지, 구조조정 특별법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때문에 이번 개악은 여성노동자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출산휴가 연장을 미끼로 한 여성 관련 근기법 개악을 반대한다!

여성보호조항 삭제없는 모성권 강화를 요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개악안) 주요내용과 비판

(자료제공 : 전주가톨릭노동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 근로기준법 제 63조(사용금지)

- 개악 내용 : 여성에게 유해, 위험사업장 종사금지과 금지직종이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협하지 않으면 전부 더 놓

겠다는 것임.

- 개악의 효과 :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위험한 금지직종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이러한 금지직종이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태에서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을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은 특히,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불임,산재, 직업병 등을 초래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68조(야업금지)

- 개악 내용 :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시 본인에게 받게 되어있는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삭제함.

- 개악의 효과 :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시 고용주의 위법한 장시간노동을 막아왔으나 이제는 장시간노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 69조(시간외근로)

- 개악 내용 : 시간외 근로 제한을 삭제함

- 개악의 효과 : 시간외근로 제한을 삭제할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어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은 보다 더 많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70조 (깡내근로금지)

- 개악 내용 : 의료,보도, 취재 등의 업무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허용

- 개악의 효과 : 일시적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에게 허용하는 깡내근로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명확한 모범으로 인해 향후 깡내근로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모성보호법 통과, 여러분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성보호관련법이 6월 26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가 법 개정운동을 시작한지 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일 안이 확정된 지 6개월만의 일이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된 모성보호관련법은 애초에 마련되었던 단일 안보다는 후퇴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계 등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된 모성보호관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중 개정내용

출산휴가 90일 확대(30일 추가 비용 고용보험에서 지급)

여성 및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 및 휴일, 시간외근로 조항 수정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여성의 야간 및 휴일 근로 가능(과거 법안 : 여성의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노동부장관 허가과 본인의 동의 있으면 가능)

임산부, 18세 미만, 산후 1년 미만 자는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과거 법안 : 노동부장관 허가과 본인의 동의 있으면 가능)

여성의 시간외 근로를 남성과 동일하게 주 12시간 내에서 허용(과거 법안 : 여성은 주 6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중 개정내용

육아휴직 1년 유급화(유급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함)

직장내 성희롱 규제 강화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 신설

파견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무화

사용사업주에게 책임부여

성희롱 벌칙강화

간접차별조항 구체화 및 규제강화

평등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강화

* 결의안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 산전후휴가급여는 모든 여성의 모성보호차원에서 국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우선부담하도록 하나,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토록 한다.

유급생리휴가제도 처리방향에 관한 결의안

: 생리휴가제도에 대하여도 향후 근로시간 · 휴일 · 휴가제도를 위한 법률개정 방향 논의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월1일 유급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가제를 삭제하였고, 자민련이 폐지를 주장하던 유급생리휴가제도는 다루지 안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정도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비록 몇 가지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출산과 양육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분담화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점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은 여성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노동이라는 선언이 내려진 것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직장내 성희롱과 간접차별규제 조항을 더욱 세밀화하고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직장 내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차별과 성희롱을 더욱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이제 규제 책이 마련된 만큼 현장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28일 본회의에서 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에 채택되지 못한 유·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가제가 하루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성이 행복하게 아이 낳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이제 몇 걸음 내딛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당당하고 힘차게 그 길을 열어갈 것이다.

여야 3당 야합, 근로 기준법 개악된 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성보호법 통과!

26일 오후 국회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68조,69조(여성의 야간,연장근로금지)를 삭제한 개악된 여성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말뿐인 모성보호법이 통과 된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선 유급기간 및 지원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후퇴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환경노동위원회법률안(대안)은 산전산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등 개선된 법개정 내용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들의 완화라는 개악도 포함되어 있어, 만일 위 법률안(대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여성노동자들은 물론 향후 전체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오늘 근로기준법상의 개악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를 삭제하고 임신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조항으로 축소하였다. 이 법조문은 근기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시 고용주의 위법한 장시간노동을 막아온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여성의 시간외노동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야간, 휴일노동 뿐만 아니라 또는 일반사업장에서 여성의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아왔으며 이 법조문으로 인하여 그나마 법을 위반하여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되었던 법조문이다. 위와 같이 근기법 제 68조, 제69조를 삭제할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곧바로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받아 최장 주 68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며, 이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은 이 보다는 더 많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성에게 유해, 위험 사업장 종사 금지와 금지직종이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험하지 않으면 전부 더 놓였다고 되었다. 그러나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험한 금지직종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이러한 금지직종이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태에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은 특히,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불임, 산재, 직업병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70조(갱내근로 금지)는 비록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허용한다고 하지만, 일시적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에게 허용되는 갱내근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명확한 모법의 단서로 인하여 향후 갱내근로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 된다. 이처럼 이번에 여야3당의 합의로 통과된 모성보호법은 한마디로 그동안 모성보호와 관련한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손들어 준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환경노동위는 여야 3당의 합의로 '유급 생리휴가 처리에 관한 결의안'까지 채택하였다.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규탄

< 성 명 >

530만 여성노동자는 분노한다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후퇴시킨 근기법 개악안 철회하라!

6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올릴 것을 결의했다. 출산후휴가를 90일로 늘리는 것을 빌미로 여성노동자의 유해위험업무금지, 야간휴일근로 금지, 연장근로규제, 갱내근로 금지 등의 법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 삭제해 사실상의 모성보호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한 파렴치한 폭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삭제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근로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연장근로는 산후 1년이 넘지 않은 여성을 제외하고는 임신부마저 무제한적인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모성보호 확대라는 법개정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에 모든 여성노동자의 근로가 가능하고, 일시적일 경우에는 갱내에서의 근로마저 가능하도록 열어 둬으로써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러한 법개악은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즐기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 시장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며 하반기 노동시간단축투쟁의 무력화를 위한 선제공격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근로기준법 68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노위 대안법률(안)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

①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1. 18세 미만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③사용자는 2항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69조

현행 근로기준법 : 제69조(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환노위 대안법률(안) : 제69조(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 : 환노위 대안법률과 같음.

기타 근로기준법 63조와 70조

여성에게 유해·위험 사업장 종사 금지와 금지직종 명시 법률 삭제(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산전산후휴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유급육아휴직수당 대폭 삭감: 환노위 대안법률안은 25만원이었으나 민주당이 대폭 삭감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늘 상임위에서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위임

시행시기 : 2001년 11월 1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문성현(文成賢) /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99-15 테호건물 2층 / 전화 (02)712-4252 / 팩스 (02)712-4253 / ID:(나,참)금속산업
2001. 6. 1 / 받는다: 언론사 노동·사회 담당 기자 / 담당: 류장현 교선실장 (3275-2675), 여성국장 임혜숙 / <http://metal.nodong.org> / 총 1 장

< 성 명 >

여성노동권 팔아먹는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생리휴가 폐지, 연장·야간·휴일근로제한 완화 등 근로기준법 개악음모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30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열어 생리휴가 폐지와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과 연계시켜 논의하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에 대해 530만 여성노동자들은 분노한다.

금속산업연맹은 노동부장관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본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것도 밥상의 가십거리로 생리휴가폐지를 논의했다는 것이 더욱 경악스럽다.

전체 여성노동자 가운데 3/4이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인데다 5인미만 사업장에 70%의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4대보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임을 노동부 장관은 정말 모르고 있던 말인가? 연맹은 생리휴가 폐지와 여성노동자 관련 모성보호 조항 확대 연계는 근로기준법의 개악음모가 분명함을 밝히며 근로기준법의 개악음모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전체 여성노동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산전후휴가 30일 연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여성노동자들을 현혹시켜 놓은 뒤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제 완화와 생리휴가 폐지 등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음모는 노동자들의 목줄을 조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음이 분명하다. 연맹은 모성권의 확대 강화 및 사회 분담화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후퇴와 결코 함께 논의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신자유주의 분쇄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모성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갈 것임을 밝히며, 현재 국회와 정부가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모성권 확대와 맞바꾸고자 하는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파견·용역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자!
근로자파견제 철폐하고
직접고용 보장하라!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 대 위 소 식

제22호

발행처 : 파견철폐공동대의
발행일 : 2001년 6월 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 전화 756-3656 / 전송 778-4006 / 참세상 GO PART, 홈페이지 <http://workin.jinbo.net>

주장

또 하나의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자!

한 손에는 몽둥이, 한 손에는
노사정위 : 김대중정권, 양손
에 댄들고

김대중정권의 노동탄압 정도가
이성을 잃고 있다. 대우자동차 조
합원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은
캐리어, 한국통신, 효성 등등 전국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실경영
의 주범은 호화판 해외채류를 즐
기고 있는데 대우차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리해고를
밀어붙인, 정권은 법원도 인정한
노조 사무실 출입권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캐리어에서는 공권력의
비호 아래 용역장폐가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을 짓밟았을 뿐 아니
라 회사 앞에서 상주하고 있다.
개다가 광주 노동청에서 캐리어
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자마자 사측은 사내하청업체
전체를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맞
섰다.

그뿐인가? 한국통신계약직노동
자들의 170여일간의 파업투쟁과정
은 공권력과 사측의 폭력으로 점
철된 과정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
다. 5월31일에는 계약직노동자들
과 114조합원들의 연대투쟁을 막
기 위해 청원경찰이 농성중인 114
여성 조합원들을 잔인하게 폭행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울산
효성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

과 용역장폐들의 폭력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되물게 할 정도
이다. 생선회관, 사계초, 석파이프,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용역장폐의
폭력 앞에서 일방적 전환배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
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어야 할
지경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

는 지금, 김대중정권은 연내 노동
시간단축과 비정규직대책을 입법
할 것임을 또다시 선언했다. 정리
해고 철폐, 구조조정 지지, 비정규
직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노
동자들을 철저히 유린하면서 도
대체 어떤 '노사정합의'와 '노동개
혁'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구조조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년 6월 5일(화) 오후 2시-8시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 민변 / 사회진보연대

- 제1부 ● **민 노동법 개악국면의 성격과 향후 투쟁방향**
김대중정권의 노동법개악의 성격과 전망 - 이종회(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현재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 김선수(민변 노동위원장)
노동법 개정투쟁의 평가와 방향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실장)
- 제2부 ●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투쟁요구**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의 완전보장 - 민주노총 비정규연대
회의
공무원·교원의 기본권 쟁취 - 전공련, 교수노조(준)
모성보호와 여성노동권 쟁취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 제3부 ● **종합토론**

노동법 개악이 준비되고 있다

정권은 노동시간단축을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월차폐지, 주휴무급화, 최장 1년까지 변형근로제 확대, 노동시간에 대한 적용예외 확대 등 현재 노사정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입법화된다면, “노동시간단축”은 겉데기만 남고 저임금장시간노동이 증기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야 한다”는 자본의 헛소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지금 계약직고용의 자유화, 파견제에 대한 규제철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일부 적용 등의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다.

당장 6월 국회에서 결판을 보게 될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은 더욱 심각하다.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명분으로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삭제 등이 공공연하게 논의되

고 있다.

한 마디로 김대중정권의 노동법 개정방향은 1998년의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 강요에 이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변형근로제 확대,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의 폭력성을 은폐하면서 노동대중의 투쟁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기만적인 ‘노사정합의’를 강요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상반기 임단투·하반기 제도개선투쟁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노동법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투쟁을 조직하자!

현재의 노동법 개악은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자 투쟁의 진전을 교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벅두의 “복수노조금지 5년연장”에 이어 매달 열리는 국회때마다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6월의 모성보호관련 근기법 개악에 이어 하반기 내내 근로기준법 개

악·비정규직 확산입법·기업변동시 고용과 노조배제를 위한 입법들이 준비되고 있다.

정권은 구조조정 투쟁전선이 흐트러질 때마다, 노동자투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기습적으로 하나하나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임단투·하반기 제도개선투쟁이라는 도식은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투쟁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이 5월 말로 예정했던 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대책 입법안 발표를 또다시 뒤로 미루고 노사정위원회에 특위를 건설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6월 총력투쟁의 에너지를 피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분할해서 관철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정리해고 철폐·구조조정 분쇄·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법 개악시도를 폭로해내고 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조사수와 노동기본권쟁취 투쟁 속에서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노동법 개악, 이렇게 진행 중!

<p>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한 임금삭감·변형근로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차·생리휴가 폐지 ◆ 주휴무급화와 임금삭감 ◆ 변형근로시간제 확대·근로시간 적용예외 확대 ◆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제한 철폐 ◆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로 전환
<p>「비정규직 보호대책」, 알고보니 비정규직 양산대책</p> <p>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구조조정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자유화 ◆ 파견근로제 확대와 파견업체 육성 ◆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부정 ◆ 기업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면제 ◆ 구조조정 완료시까지 정리해고요건 완화 ◆ 금전보상을 대가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해고보상제 도입 ◆ 기업변동시 노동조합 자동해산제 도입

청년제2조장 명중목각영역
 생리휴가조 공조
 파출공 과학청
 부노동당 전국학생대표자회의

여성관련 근기법 개악, 생리휴가 폐지 없는 모성보호법 제정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자!

유현경(파견철폐공대위 교육기획팀장)

김대중 정부의 총선공약이었던 모성보호법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제계와 자민련의 조직적 반발로 정치권은 기만적인 2년 유예에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비용의 문제를 들먹거리며 출산휴가만 90일로 연장하는 기만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5월 30일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 위원들과 오찬회동을 열어 생리휴가 폐지와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을 연계시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나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모성보호 입법논의를 여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규제조항을 푸는 것과 연계시켜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모성보호 입법 제정시 생리휴가 폐지, 여성관련 근기법 개악이라는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기업부담 증가,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경총과 전경련은 끊임없이 여성고용에 대한 기업부담이 늘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여성노동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와 여성·노동계를 압박해 왔던 것이다.

- 연장·야간·휴일노동, 유해·위험노동으로부터의 여성보호 조항을 전원 삭제
- 생리휴가 폐지를 노사정위로 넘겨 월차휴가와 함께 폐지하며 시간외가산수당등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삭감하는 등의 노동법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구분	항목	노동여성계	자본
여성고용	생리휴가 야업 휴일근로 제한, 시간의 근로 제한 등	현행유지 현행유지	폐지 폐지 또는 완화
모성보호	출산휴가	60→90일 확대	조건부 확대(사회분담)
	육아휴직 급여	제도 도입	도입연기(사회분담)
	태아 검진휴가, 유산 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도	제도신설	신설반대

모성보호법을 전제로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정권

- 모성보호법 개정은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에 맞서 싸우는 과정의 연장선에 놓여야 한다. 현재의 노동법 개악은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자 투쟁의 전선을 교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벽두의 "복수노조금지 5년연장"에 이어 매달 열리는 국회때마다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6월의 모성보호관련 근기법 개악에 이어 하반기 내내 근로기준법 개악·비정규직 확산입법·기업변동시 고용과 노조배제를 위한 입법들이 준비되고 있다.

- 월차폐지, 주휴 무급화, 최장 1년까지 변형근로제 확대, 노동시간에 대한 적용예외 확대 등 현재